

수월적 연구물 생산을 촉발하는 전략 소고: 『보건사회연구』 우수논문 콜로키움을 중심으로

박 능 후
(경기대학교)

노 용 환
(서울여자대학교)

임 재 영
(고려대학교)

고령화, 양극화, 장기침체 가능성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월한 식견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 및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논문의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월성 높은 논문 작성을 유인하고 이를 격려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학계의 관심 사항을 넘어서 국가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과제를 맡게 해준다. 우리 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홍수, 질적기근」의 논문생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건사회연구』 편집진은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월성을 보이는 논문을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자를 격려하고 더 나은 연구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서 우수논문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우수논문 시상과 집담회 형식으로 개최된 콜로키움은 융합학문의 사회적 기여가 날로 중요해 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 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소통은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보건·사회분야의 융합적 연구는 물론 이론과 현실정책을 접목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보건사회연구』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주요용어: 양적홍수, 질적기근, 수월성, 우수논문, 융합적 연구

이 논문은 '제1회 보건사회연구 우수논문 콜로키움' 결과를 박능후 편집위원장과 노용환, 임재영 편집위원이 요약 정리한 글임.

I. 문제인식

한국 학계에서 논문 작성에 대한 압력은 매우 높다. 교수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정 편수 이상의 논문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시 되어 있고, 입직 후에도 승급 혹은 승진요건으로 매년 일정 편수의 논문 작성을 요구한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논문 작성에 대한 압박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각 기관을 서열화하는(한국건설신문, 2015.9.30) 등 간접적으로 논문작성을 압박하기도 한다.

논문 작성에 대한 유무형의 사회적 압박은 학술논문을 발표할 공간 확대와 발표논문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등재 학술지 체계가 처음 도입된 1998년 총 56개에 불과하던 등재학술지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8월말 현재 2,299개에 도달한 사실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양은 질을 낳기도 하지만 급속한 양적 확대는 도리어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논문의 질을 따지지 않고 작성된 편수만을 기준으로 개인의 연구성과를 측정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수의 수월한 논문을 작성하기보다 짧은 시간 내 심사 요건만 구비한 평범한 논문을 양산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연구자 개인의 일신상 필요에 의해 쏟아져 나오는 논문은 그 나름 기능을 다하지만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답을 제시하는데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고령화, 양극화, 장기침체 가능성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월한 식견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 및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논문의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월성 높은 논문 작성을 유인하고 이를 격려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학계의 관심 사항을 넘어서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과제임을 말해준다.

1981년 창간 이래 지금까지 『보건사회연구』는 인구, 보건, 사회 및 경제 분야 이론과 정책을 아우르는 융합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수많은 정책 제언들을 소개해 왔다. 특히 『보건사회연구』는 매 분기 발간시점에 쟁점을 분석한 언론보도를 통해 중요 연구업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등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에도 힘써 왔다. 적지 않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35년 역사의 『보건사회연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적 팽창의 사회적 기류 속에 규격과 형식을 갖춘 기성품같은 논문 생산에 치중하여 창발적 사고와 도전적 연구정신을 촉발하는데 미진하였던 점이 우선적 극복 과제이다.

『보건사회연구』 편집진은 우리 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흥수, 질적기근』의 논문생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방식 다양화, 양질의 심사자 풀 조성을 통한 심사수준의 제고 등 투고-심사-게재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상 개선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여기에 더하여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월성을 보이는 논문을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자를 격려하고 더 나은 연구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서 연구자들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우수논문 시상과 집담회 형식으로 개최된 콜로키움의 의의와 함의를 수월성을 구비한 연구물 창조 전략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II. 우수논문 콜로키움

1. 우수논문 콜로키움 개요

『제1회 보건사회연구 우수논문 콜로키움』은 2016. 6. 17.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1호 ~ 제35권 제4호 (2014. 3 ~ 2015. 12)에 게재되었던 150편의 논문 중에서 편집위원회 주관의 수월성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보건분야 2편, 사회분야 2편이 콜로키움의 소재가 되었다.

보건분야 논문은 이용우의 ‘가구소득과 아동기의 건강 불평등’, 우경숙·신영전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과 빈곤을 중심으로’ 두 편이며, 사회분야 논문은 이왕원·김문조의 ‘한국인의 생활전망 잠재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불평등과 주관적 불평등의 효과검증을 중심으로’와 석재은의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두 편이다.

콜로키움의 전반부는 시상식으로서 우수논문 저자에 대한 시상과 논문저자들의 소감 발표가 행해졌다. 후반부는 보건과 사회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논문 저자들의 간단한

주제발표 이후 참여 패널들의 질의, 저자들의 응답과 상호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저자들의 발표는 『보건사회연구』에 이미 게재되어 있는 논문을 요약하기보다 주제의 착안점과 논문 작성과정에서 직면했던 어려움, 스스로 느끼는 논문의 한계,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토론자들은 훌륭한 논문을 작성한 저자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는 질의하기 힘든 심층적인 질문과 추후 연구진행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의견 개진을 하였다. 우수논문의 학문적 성과와 의의, 그리고 향후 학문발전을 위한 함의 등 집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보건분야 우수논문 집담회

가. 발표논문 1: 가구소득과 아동기의 건강 불평등

이용우의 논문 '가구소득과 아동기의 건강 불평등의 학문적 성과와 의의'는 소득수준이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인과관계의 모호성, 즉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건강수준과 가구소득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된 아동건강을 종속변수로, 가구소득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패널순위프로빗모형(panel ordered probit model)을 활용함으로써 분석 대상인 아동의 관찰되지 않는 개별적 이질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비록 아동건강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주관적 건강수준만을 사용한 점,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만성질환별 분석 및 생활습관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그리고 소득과 아동건강의 양적 관계가 중·고교시기에 완화된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 등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아 있으나, 건강 불평등의 주제를 다른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전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 불평등이 향후 이들의 건강상태 및 소득, 학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는 점은 본 논문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집담회에서 논의된 쟁점은 첫째, 아동기의 건강수준을 파악하는 이슈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은 아동기의 건강수준을 만성질환 보유 여부로 나타낸 것에 대한 사항이다. 즉 아동기는 만성질환이 발병하고 제대로 진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발병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한 선천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어머니의 초산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아동기에는 만성질환 자체가 표면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진단된다 하더라도 응답자인 아동의 특성상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다루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만성질환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아동들의 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가구 소득 간 상호관계가 이질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긴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동기의 건강수준을 만성질환 보유 여부로 측정함에 있어 아동기 만성질환의 특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선 아동기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좀 더 다양한 지표의 사용이 필요하며 각 지표별 특성에 따라 연구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동하는 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가구소득이 아동기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기 건강수준이 그 이후 단계인 청장년기, 노년기로 어떻게 전이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건강불평등 이슈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논거로서 사용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 이슈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비교적 매우 높고 교육과 관련하여 충분한 변이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건강수준 결정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환언하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가구의 소득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건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선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연령대별로 상호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난 본 논문의 결과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여부가 미친 영향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과 장시간 노동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며, 따라서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보다 엄마의 장시간의 노동이 문제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보살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경우, 장시간 노동은 아동의 건강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여부 이외에 노동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추후 필요하다는 내용 또한 제시되었다.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엄마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건강수준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선 엄마의 교육수준과 상호 연관된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제공하는 노동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엄마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건강수준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엄마의 교육 수준과 직업 상태(job status)를 나타내는 변수의 교호항을 분석에 포함시켜 보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발표논문 2: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경숙의 논문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과 빈곤을 중심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즉 갑작스럽게 발생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추이를 파악하고, 의료비 지출에 대한 재정적 대응 전략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의 정의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어 연구자마다 상이한 역치값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역치 기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결과의 민감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와 전년도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만을 포함하였으며, 각 재정적 대응 방식이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즉 두 사건 간 긴밀한 인과관계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으나, 본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를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달리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주요 사회 안전망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의료보장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담회에서 제기된 쟁점은 첫째, 재난적 의료비의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소개되어 있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뿐 아니라 다소 간략히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난적 의료비의 측정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응답자의 지출 노력 등과 같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환언하면, 재난적 의료비에서 ‘재난적’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주관적인 바, 이를테면 고소득자에게 전체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의료비와 저소득자의 10%에 해당하는 의료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른 무계로 체감될 것이므로 가처분 소득의 수준에 따른 계층화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효과가 빈곤 집단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나는 등,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의 분석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도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특정 역치값을 기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와 비지출 가구를 이분법(binary)적으로 분류하는 대신, 이를 연속변수로 반영하여 각 가구의 지출수준에 대해 보다 세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의 지표 개발에서 역치값 설정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체 응답자의 의료비 지출액 분포를 그려보고, 각 소득 계층별로 지출액 패턴을 분석해서 outlier 값들을 고찰해서 이를 토대로 재난적 의료비를 정의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법은 연구자의 역치 설정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첫째, 본 콜로키움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재난적 의료비 측정을 위한 역치 설정 방식들이 갖고 있는 특징 및 한계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재난적 의료비의 규모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질병군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 발생과 소득수준 간 양방향성(bi-directional), 즉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득 저하 및 저소득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 모두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재난적 의료비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한 제도적 측면에 대한 사항이다. 우선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국은 Medicaid와 같은 공적보험제도 혜택의 수혜 여부에

따라 가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혜택으로 이 효과가 비교적 작게 나타나거나 제대로 측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질병이 아니라 해도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의 경우도 별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가구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한 이슈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논의된 내용은 재난적 의료비를 정의하거나 측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비급여항목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소득수준별로 7단계로 세분화되어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재난적 의료비 또한 '소득 계층별' 재난적 의료비로 구체화해서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전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의 제안은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보건분야 집단회 소결론

보건의료분야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수준 간 관계와 관련하여, 첫 번째 논문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개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논문에서 역으로 건강수준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재난적 의료비 수준이 가계경제, 즉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두 변수 간 양방향 관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수준 관계에 대한 진일보한 그리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점은 본 콜로키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콜로키움에서 제기된 경제수준과 건강 사이의 상호연관성 이슈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수준과 건강 사이의 분석과 관련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이 나름 효용성을 갖고 있으나, 특히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 패널자료의 확보가 반드시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은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패널자료의 확보보다는, 분석 시작 시점에 있어서 건강수준 혹은 경제수준에 대한 통제와, 변이의 중간과정

에서의 동화적인 모습(dynamic process)에 대한 고려라는 사실은, 이 이슈를 연구하는 후속 연구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점에 대한 통제 및 중간 과정에서의 동화적인 모습을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으로 동화적 구조모형 추정(dynamic structural model estimation)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의 활용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논의는 단지 현상에 대한 소개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 제시와 이의 기대효과를 보다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방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사회분야 우수논문 집담회

가. 발표논문 1: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다차원적 평가...

석재은의 논문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은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속가능성을 재정·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정의하였고, 이들 유형과 결합되는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OECD 국가 중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국가의 복지 지속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복지 지속가능성은 17위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양호하며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빈곤, 소득불평등, 인구재생산, 평균수명,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저자는 서구 선진국과 달리 한국이 "경제생산체제보다는 분배체제로 무게중심을 옮겨 생산체계와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복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재정적 관점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저자의 인식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다양한 복지 욕구의 증대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경제주체들 간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필요로 한다.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저자의 다차원적 검토 시도도 결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현실 가능한 자원의 공급을 전제

로 하는 것이다. 다만 저자는 복지의 지속가능성이 재정위주의 '투입'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지만,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성장우선' 혹은 '분배우선의 대립되는 논쟁 속에서도 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복지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와 재정의 선순환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를 얘기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복지 없이는 경제주체들을 생산현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충적 주장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된 적이 있었던가? 이에 대해 저자의 연구가 한 가지 실마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공적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생산과 분배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모호성을 뛰어 넘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영수 등(2014)은 50여개 국가의 '통합자료'(pooled data, 1981-2010년)를 이용하여 양질의 제도가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쉽게 함으로써 좋은 경제정책의 입안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여기서 양질의 제도라는 것은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으로 규명하였는데, 이 같은 국가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쌓여 국민들이 정책의 결과(분배)에 쉽게 수긍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정부 정책의 시행으로 이어져 경제도 발전한다는 것이다.

신영수 등(2014)의 연구결과는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복지의 지속가능성 조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며, 이는 공적 신뢰가 경제적 번영을 결정한다고 본 석재은 교수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불신의 벽이 높으면 개인적으로 파편화된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 간 격차의 확대나 불안, 격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도 커진다. 따라서 석재은 교수는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으려면 가족중심의 배타적 집단주의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연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석재은 교수의 주장대로 사회연대가 높은 국가들의 사회적 신뢰가 어떠한 조건에서 형성되어 왔고,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집담회 참여 패널들은 복지국가를 제도나 프로그램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다차원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데 저자와 인식을 같이하였다.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조하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자원의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 그리고 사회투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복지정책과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경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한 복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재정적, 사회적, 그리고 이념적 지속가능성 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러한 내용을 지표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복지모형으로 '가족중심의 안전망'(social family: 친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사회의 구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토론자 대부분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국가 간 복지 지속가능성의 양적 비교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저자의 연구에서 지속가능성의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며 논문의 초점이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있다기보다는 현재적 복지국가를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수준의 경제성장이 유지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일 수도 있으며, 선진국형 저성장도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성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논의 할 때 GDP 시각에서 탈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

재정과 관련한 지속가능성의 평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적자 지표를 고려하고 있는데, 종합지표는 의미가 있지만 개별지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보장성이 생략된 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간 상대적 순위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정지표와 사회지표를 포함한 개별 지표에 대한 임계치를 구해 종합적으로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모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저자의 연구 의도에 동의하면서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정량분석에 대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성립하므로, 복지의 지속가능성은 자본주의 자체의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은 복지국가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다차원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로서 국가별 복지의 지속가능성은 공통된 다차원적 지표뿐만 아니라, 국가 고유의 개별적인 특성과 복지제도 도입 시 출발점의 상이함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UN의 인간개발지수(HDI)와 같은 국가 간 지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국가별로 유형화하여 살펴보는 경우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즉 저자의 연구는 문제의 출발점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가 복지의 지속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북유럽국가와 닮았는지를 평가하는 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북유럽을 '롤 모델로 전제로 하는 연구는 아니었지만, 결국 북유럽처럼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좋지 않은 것이라는 식의 결론에 묶이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한국의 복지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양적 지표가 감안하지 못하는 미래 경제·사회 구조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원종욱(2015)은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하면서 복지 지출의 증가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실제 OECD 사회복지재정 범위를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2015년 GDP 대비 11%에서 2050년에는 26.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박종서(2016)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초래하는 인구 감소 국면에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구고령화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은퇴시기의 연기와 급여적정성 제고 조치가 수반되었다는 우해봉(2016)의 연구결과도 복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인구감소와 복지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 하려면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산업의 육성, 사회보험체계의 수정, 재정개혁, 교육 및 국방 등 사회 각 분야의 고령친화 정책 수립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과 사회체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발표논문 2: 한국인의 생활전망 잠재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왕원과 김문조의 논문 '한국인의 생활전망 잠재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불평등과 주관적 불평등의 효과검증을 중심으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물질적

1) OECD 사회복지재정은 사회적 위험(노령·실업·재해·질병)에 대한 현금, 재화, 서비스 등의 사회적 급여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요소보다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주관적 의식 요소가 잠재집단 소속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가구생활 전망의 핵심적 설명요인이 객관적 불평등이 아니라 그에 대한 주관적 해석임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 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가 대부분 구조적 변수에 치우쳐 왔음을 고려할 때 의식적 변수에 의해 우리나라 가구생활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공동저자인 김문조는 사회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회학’의 임무이며 사회는 사회학자들에게 늘 시대적 고민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화두임을 강조한다. 김문조는 과거의 계급구조나 불평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으며 주관적 지표는 부가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이 양극화 위주로 전개되면서 불평등은 단순히 상층과 하층 간 소득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 문화적 의식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유재의 불평등이나 소득의 불평등 같은 객관적 변인보다는 불평등을 유발하는 주관적 변인을 식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김문조는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도 역사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나라 불평등의 객관적 구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양식’(life style)과 의식도 분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물질 불평등과 함께 기회적 불평등 때문에 지난 20여 년 동안 신분 상향 이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사회 유동성이 저하되고 계급질서가 고착화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살며 체념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만성적 청년실업 하에서는 다수가 미래 생활에 대해 기대보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저자인 이왕원도 한국사회의 ‘야망계급’대 ‘절망계급’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한국인의 65.4%가 전망(미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며, 소수의 특권층이 희망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김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그는 과거 산업화 세대의 경우 “자신의 삶은 어렵지만 자식세대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상향이동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세대는 의식적 불평등이 팽배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매우 적다는 주장에 동조한다. 특히 대다수 청년 세대가 희망이 없고, 주관적 의식도

낮으며, 삶의 만족도도 낮다고 진단한다.

이왕원과 김문조의 연구는 이왕원의 주장과 같이 “객관적 구조가 주관적 인식을 통해 미래 전망(희망)을 결정하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입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불평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복을 결정하는 의식적 요인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왕원은 학벌구조 대신에 직업구조 등 제도적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甲질 논란과 ‘금수저·흙수저론’은 단순히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치부되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고착화, 부모의 지위가 자식의 지위를 결정한다고 믿는 청년세대의 좌절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여유진 등(2015b)는 계층상승에의 희망에서 비롯된 한국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중산층 이상과 하위계층의 지위 고착화가 심화되었다는 실증 결과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전국 성인남녀 설문조사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높으면 사회이동 가능성도 낮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이동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실증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문조는 한국사회에서 이미 의식 분화가 독자적인 불평등의 요인이 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계급질서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참여 패널들도 현재 한국 사회는 과거 소득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불안감을 상쇄하던 것이 어려워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왕원·김문조의 연구결과에 공감하였다. 특히 한국의 1970년대를 빈곤 및 ‘부족(scarcity)’의 시대, 1980-1990년대를 상대적 빈곤의 시대, 2000년대를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나타난 ‘불일치’(mismatch)의 시대로 규정한 한 패널은 이제 우리도 ‘계급(class)’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회학적 관심사와 사회의 관심사 간 불일치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관심사인 ‘계급의식(class consciousness)’에 대해 사회학적으로도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패널은 빈곤했지만 희망이 있던 시절에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하면서 화이트칼라층의 직업군들이 구조적으로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경쟁을 해도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구조적 계급이동이 가능하지 않고 계급이 고착화되어 이를 지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절망이 생성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녀교육도 계급의 상승보다는 유

지를 위해 이루어지고,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희망보다는 절망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과 절망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상승하고 복지제도의 발전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는데, 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참여 패널 중 한 사람은 양적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 이용의 현실적 제약요인을 감안한다면 양적연구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지속가능성’과 ‘절망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자살률과 ‘출산율’이라고 주장한다.²⁾ 동 패널의 주장에 근거하여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는 암담하다고 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절망과 불안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 패널은 한국사회의 계급화와 현 세대의 미래에 대한 절망 및 우리가 가진 행복이라는 관념의 변화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면서 한국인의 분노, 격분, 불만은 가족주의적 잔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지적한다. 즉 어릴 때부터 입시경쟁을 시작하여 취업경쟁, 실직불안, 승진불안, 노후불안 등 유형이 다른 불안들이 중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불안의 전파속도도 빨라졌다고 주장한다. 자기 자식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기대가 가족 전체를 불안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상영 등(2015)은 한국 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은 정서적 반응보다는 사회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불안해소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사회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계급화와 계층화 문제가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토론을 통해 제기된 사실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인 인지적 판단이 개입되는 ‘계층과 행위적 요소를 내포하는 ‘계급의 구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 방법론적으로도 복지패널 자료의 미래 전망에 대한 변수는 가구원이 아닌 가구주에 대한 질문에 의해 구성되므로 개인의식을 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노동 계급은 사회정책에 의해 만들어 지며, 계급은 사회변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

2) 여유진은 지속가능성과 절망을 대리하는 지표가 자살률과 출산율이라고 한다. 즉 자살률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출산율은 미래세대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파업과도 같은 것이기에 결국 이 두 지표가 사회가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는 점을 지적한 패널에 의하면 계급은 구조적·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한국사회의 계급과 계층이 객관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영 등(2015)은 한국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실직, 가계부채, 노후문제, 학업 및 진로문제 등 개인적 요인과 저성장, 실업, 범죄 등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면서 사회적으로 개인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복지정책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인적 불안요인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사회이동성 확보가 국민들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여유진 등(2015b)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유진 등(2015b)은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회의 평등, 안정적 일자리 확보 등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계급이나 계층의 상승의식은 사라지고 있다 해도 여전히 과거의 관심이 남아 있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패배의식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공감의 간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 패널은 “절망의 연대도 연대이다”라는 관점에서 집합적 연민의 형성을 통해 희망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복은 안에서, 불행은 밖에서 온다”는 다른 패널의 근원적 답변에서도 우리 사회가 가진 절망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행복의 다양한 의식적 요인을 찾아내는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사회분야 집단회 소결론

우리나라는 지난 4반세기 동안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 OECD 선진국이 시행 중인 대부분의 사회보장정책을 수용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 불평등과 양극화, 높은 자살률,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삶의 만족 수준이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분야의 수상논문 두 편의 연구주제인 ‘복지의 지속가능성’, ‘계급화’, ‘불평등’은 큰 틀에서 보면 모두 한국형 자본주의가 잉태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이는 절망계급과 지속가능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여유진(2015b)의 인식과도 같

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대칭적 성장, 지역별·학력별 소득격차와 같은 양적인 불평등을 키워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정부주도로 시장경쟁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사조의 유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조, 규제완화,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과도하게 추구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 엘리트주의를 조장하면서 적자생존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며, 임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양극화 심화, 경쟁력 없는 산업부문의 도태라는 불평등의 골을 심화시켰다.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적 조건은 경제성장과 안정적 고용, 그리고 건전한 정부재정의 뒷받침에 있다. 경쟁이 기본이 되는 경제적 효율성의 폐해를 보정하고, 생산요소의 소유자(노동자, 자본가) 뿐만 아니라 각 가계 계층에게 돌아가는 본원적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결국 정부의 재분배 기능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석재은의 논문과 이왕원, 김문조의 논문은 우리 사회의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함수는 어떠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정부가 진정한 ‘자비로운 사회계획가(benevolent social planner)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과제를 남겨주었다. 한 패널의 주장과 같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의 개념화는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가야할 길은 멀겠지만 윤리적 측면에서 ‘정신적 자본’(mental capital)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인성과 신뢰 회복을 이룩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유진 등(2015a)이 모색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계층별 불안정성과 빈곤에 대한 현실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제도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III. 결론과 제언

『우수논문 콜로키움』은 연구결과물의 출간 이전에 동료학자와의 토론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학술세미나와는 달리 이미 게재 완료된 학문적 성과가 우수한 연구결과를 선정하여 전문가 집단의 심층 토론을 통해 학문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공동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건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상작을 중심으로 창의·융합적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연구의 관점을 다양화하고 현실 정책에의 활용 가능성도 동시에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콜로키움은 융합학문의 사회적 기여가 날로 중요해 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 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소통은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보건·사회분야의 융합적 연구는 물론 이론과 현실정책을 접목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보건사회연구』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콜로키움을 통해 제기된 『보건사회연구』의 발전방향의 하나는 보다 가치 있는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다수 영역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동연구 및 장기간의 추적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사회연구』는 기초연구자료의 축적 및 투고되는 일반적인 논문의 단순한 게재 외에 사회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긴요한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체계적, 융합적으로 접근해 가는 기획논문의 게재 등 시야의 확대가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홍수, 질적 기근」의 우려스러운 논문생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학문 발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술지가 관행적으로 형성된 투고·심사·게재의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심사의 객관성 유지와 동시에 수월성 높은 논문 생산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박능후는 미국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2년부터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문제, 사회통합, 사회보장제도 일반이다.

(E-mail: npark@kyonggi.ac.kr)

노용환은 미국 Iowa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0년부터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미시계량분석, 사회경제연구, 중소기업연구이다.

(E-mail: yhnoh@swu.ac.kr)

임재영은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0년부터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보건경제, 보건정책연구이다.

(E-mail: jylimecon@korea.ac.kr)

참고문헌

- 박종서. (2016).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 지속발전 가능성 강화전략. 보건복지포럼, 232, pp.18-28.
- 석재은. (2014).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보건사회연구, 34(4), pp.5-35.
- 신영수, 노용환, 이동원, 문외술. (2014). 제도의 품질과 경제성장. 경제분석, 20(3), pp.75-110.
- 여유진, 김미곤, 구인회, 김수정, 윤자영, 허순임, 최준영. (2015).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연구보고서 2015-2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2016).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동향(2009~2015)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34, pp.34-45.
- 원종욱. (2015). 사회보장지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경제포럼, 8(4), pp.103-120.
- 이상영, 정진욱, 황도경, 손창균, 윤시몬, 채수미 등. (2015).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왕원, 김문조. (2015). 한국인의 생활전망 잠재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불평등과 주관적 불평등의 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pp.5-41.
- 이용우. (2014). 가구소득과 아동기의 건강 불평등. 보건사회연구, 34(3), pp.7-32.
- 한국건설신문. (2015).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 1편도 게재 안 해'. <http://www.conslove.co.kr/news/>에서 2016.9.25. 인출.